

## 南·北 學術交流의 과제와 전망

李 鍾 旿

(啓明大 社會學科)

## 1

최근 문자 그대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남·북 간의 정치·경제·문화적 교류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72년 7·4 공동성명 이래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조짐이 여러 번 있었으면서도 이는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은 사회주의권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불허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學術交流의 課題를 제기하고 이때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토의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하 남·북 간의 학술교류를 '추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을 살펴 보기로 하자.

## 2

1990 년대에 접어들어 남·북 간의 民間交流는 일정하게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일로서는 지난 11월 25~29일에 있었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회의이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와 유사한 민간단체들끼리의 회의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그러나 이 모

든 회의는 사전신청, 승인 내지는 최소한도 사후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남·북간 접촉은 해외에서 이루어질지라도 정부를 완전히 배제시킨 채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그것이 남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실질적인 공동주최자가 되지 않는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남한식 관습과 이해에 따라 본다면 사실상 북한에 '남한식' 민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쪽에서 '남한식' 민간단체를 북한에서 찾아 순수 민간교류를 추구한다면,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수 민간단체끼리의 순수하고 자주적인 민간교류란 현실에서 있지 않은 일이며 그것은 아마도 통일의 시점까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인식하고 또한 인정하는 위에서 남·북 학술교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 단체들끼리의 相互交流는 우선 체육과 국악 등 문화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체육분야에서 축구팀의 상호방문, 탁구단일팀 공동구성 등은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은 정부간 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정부가 사실상의 주최자였다. 또한 정부가 사실상의 주최자

었다는 것이 이러한 행사가 가진 의의와 효과를 결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남·북 간의 학술교류, 특히 人文·社會科學 분야는 이와는 성격을 크게 달리한다.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사이의 교류는 흔히 비정치적인 교류에서 시작하며, 이때 非政治的 交流은 흔히 체육교류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평통외교라는 탁구선수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가장 유명한 역사적 전례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비정치적인 것이 가장 政治的인 手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도 체육은 가장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따라서 비정치적 순수 체육교류란 앞으로 상당 시점까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과학은 체육과는 또다른 예민한 政治的 性格을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다. 체육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과학으로서의 인문·사회과학은 그 자체가 현실의 정치적 해석과 이해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정치 그 자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육이나 국악행사의 교환이 남·북의 정치적 관계개선에 선행할 수는 있어도 인문·사회과학의 교류가 남·북간 關係改善에 선행하는 일은 힘들 것이다. 남·북 간에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아마도 학문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즉 非人文·社會系 분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사정과는 달리 사실상 남·북 교류의 필요성이 가장 크고 또한 학술연구자들 자신의 바람이 가장 강한 부분은 바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이다.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남한의 학계와 연구자들이 학문적 필요성에서 북쪽을 찾는 분야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자연과학과 공학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계 최첨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서구 그리고 소련학계와의 교류가 보다 큰 현실적 필요일 것이다. 아마도 북한의 자연과학·공학계에서의 남·북 학술교류의 필요성과 바

람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리라 여겨지나, 그들도 위에서 언급한 세계 최첨단 수준과의 교류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남에서도 그렇고 북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分斷狀況으로 인하여 불구화되어 있다. 분단상황이라는 이지러진 현실이 우리의 現實認識과 理解의 많은 부분을 이지러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의식을 바로잡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지러진 현실 자체가 바로잡힌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로잡는 일이 현실 자체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술부문은 分斷現實을 克服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남·북의 불구화된 인식 차이를 그대로 지닌 體資本 혹은 武器에 의해서, 政治協商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면 그 후의 민족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통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병합 혹은 불안한 공존상태에 불과할 것이다.

분단상황의 응축된 표현이 현재 남·북 인문·사회과학의 현실이라고 본다면, 인문·사회과학에서의 分斷現實의 解消라는 것은 민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크나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남·북의 학자와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 놓고 이야기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는 오히려 금물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차원의 남·북 관계 진전과 학문세계에서의 관계 진전은 일정하게 同伴的 關係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수준에서의 남·북 관계가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학술분야는 비약적 성과나 교류 활성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남·북의 연구자들과 기존의 연구성과 자체가 분단상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그의 소산이라고까지 본다면 學問世界의 分斷狀況 극복의 과제는 매우 지루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닐도양단식의 돌파와 성취를 바라서는 안 된다.

### 3

사회주의권의 대변혁 이후 소련이나 동유럽과의 학술교류와 남·북 학술교류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동구나 소련의 경우와 달리 북한은 체제변혁이나 노선수정이 기본적으로 없는 희귀한 사회주의의 예에 속한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혹은 '70년대와는 달리 북한의 내부사정, 특히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거둬드는 체제수호와 북한체제에는 아무런 불안이 없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체제의 위기를 점차 실감하는 듯하다. 우선 남·북 관계에서 '70년대까지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남한에 의한 자본주의식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수시로 표출하고 있으며, 소련이라는 유력한 동맹국을 상실함으로써 군사·외교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놓이게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 북한의 남한 및 외부세계에 대한 정책은 두 가지의 모순된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유엔가입, 조·일 수교교섭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외부세계, 특히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한 接近과 開放이다. 이는 특히 김정일체로의 권력승계 과정과 그후에 더욱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다른 하나는 객관적 정세가 불리함과 국내의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政治思想的 統制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사상적 통제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물질적 생활조건 개선이 수반되지 않을 때 체제불안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즉, 開放과 統制라는 상호모순된 그러나 필요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남·북 간의 학술교류는 개방적 태도의 범주에 들어갈 것인가 혹은 정치사상적 통제 강화라는 측면에 의해서 규정받을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통제 강화라는 측면에 의해서 규정받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그것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남·북간 학술교류에 그리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 學術交流的 展望은 그리 밝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남한 학계의 구조 속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 보자.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 하나는 남한사회 내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批判的 혹은 抵抗하는 社會勢力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비판 내지는 항거의 일정한 공간이 존재하며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二元的 構造는 학술계에도 반영되어 비판적 학계 혹은 학술운동이라는 영역이 존재한다. 물론 학술운동과 대별되는 제도권 학계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거나 자본과 국가권력 등 지배구조의 단순 하수인이라는 도식은 성립할 수 없다. 만약에 남한 학계를 제도권과 학술운동으로 구별한다면 이는 바로 남한학계 및 사회의 多元性 혹은 多元主義의 표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에는 이러한 남한식 다원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식 관점으로 보면 북한학계란 전부 제도권, 혹은 악의적으로 보면 어용학계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다원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대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여야 하는가는 미묘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인문·사회과학계, 그중에서도 '80년대 이래 발전하여 온 學術運動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저항정신으로 차있는 부분이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학계에 제도권과 비판적 학술운동의 구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사실상 국가와 학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主體思想은 전 인문·사회과학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혹은 허용되는 철학·사상, 따라서 방법론인 듯하다. 그동안 남한사회 내에서 가장 급기시되었던 이론·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은 남한 인문·사회과학계의 새로운 연구영역이며 그 연구성과가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학술운동의 대부분은 아마도 주체사상을 유일한 방법론이요, 철학·사상으로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 학술운동 주체의 관념적 바탕은 아마도 자신들 같이 주체사상에 대해 일정한 학문적 거리를 유지하는 학문동료를 북에서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학계 내지 사회에서 多元主義의 허용, 즉 유일사상의 원천에 일정한 수정이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학술교류의 생명은 自由討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로 다른 학문적 분위기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 남·북 학계의 자유토론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해 볼 근거가 있는 것이다. 축구나 탁구 등의 체육교류와 학술교류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 축구나 탁구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과 진행의 원칙이 학술부문에서는 대단히 불안하고 취약한 상태로 존재한다. 남·북 학술교류에 있어서 사실상 어떤 규칙이라기보다 어떠한 태도로 토론에 임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큰 숙제로 제기되어 있다.

여기서 최근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南·北·日 여성들의 서울토론회를 다시 한번 살펴 보자. 이는 학술단체 혹은 학자들에 의한 학술행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여성단체들에 의한 여성운동의 만남과 대화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많은 부분에서 학술행사적 요소가 있었고, 특히 남한에서는 여성학자 내지는 지식인들이 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모임은 민간·학술차원의 南·北對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문제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토론회는 각자가 자기 얘기를 하였고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된다. 이 토론회는 결국 남·북 사이에 정부관리가 대화하지 않고 민간대표들이 대화하였다 하더라도 엄청난 현실적 벽이 존재함을 확인시켰다고 할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볼 때 앞으로 자주 만나 지속적으로 대화한다면 이러한 현실의 벽은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흔히 이야기된다.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겠지만, 불행한 경우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더 들을 필요가 없어 대화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서울토론회에서 제기된 통일방안, 북쪽의 사회체제, 한국 전쟁에 관한 발언들은 진부한 이야기들이며, 이것이 남·북의 화해와 이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흔적을 별로 찾아 볼 수 없다. 인문·사회과학의 토론에 있어서는 예리한 쟁점의 부각이 쉽게 예상되는데, 남·북 화해와 이해를 위하여 이러한 쟁점을 피하고 토론을 절제하였을 경우

에 이를 학술행사로 보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럴 경우 그것은 통일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술교류를 통일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하는가 혹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 학술교류로 이해하여야 하는가의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점이 동구와 소련 등과의 학술교류와 남·북 학술교류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4

학술교류를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반드시 그러한 성격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류를 추진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들이 존재하는가를 살펴 보자. 남쪽의 경우는 학술운동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多元的立場이 공존하고 있다. 남·북 학계의 교류는 남·북의 이해증진과 상호 시각의 차이를 좁혀나가 결국은 통일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입장과 이러한 다분히 자유주의적 입장을 비판하고 남·북 학술교류는 통일과정의 일환 혹은 통일운동의 일환이라는 분명한 문제의식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 문제에 관한 북쪽의 공식·비공식 입장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어떠한 학술교류와 협력사업도 ‘통일’을 전제로 한다는 명문적 선언을 앞세워야 한다. 어떤 분야의 학술행사건 순수 학술분야(들)의 개별적 토론·발표·연구와 동격으로 통일문제 분야의 그것을 병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는 순수 학술교류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이영희, 『사회평론』, 1991.5. 璽平統 당국자와의 대화중)

북쪽의 남·북 학술교류에 대한 입장은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에서 또한 여타 수준의 교류에서 익히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종의 政治優先主義(혹은 통일우선주의라는 명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남쪽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쉬운 것부터,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순수 민간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은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봉착하여 있다.

1990년 순수 민간단체이며 비판적 학술운동 진영의 결집체라고 할 수 있는 學術團體協議會

(학단협)의 남·북 학술회의 개최 제안이 북으로부터 별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통일운동과 관련된 범민족회의와 범민련사업에 대한 북쪽의 열성적 태도는 이와는 극히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남한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범민족회의, 범민련 등에 대해서는 탄압적 자세를 가지면서 학단협의 남·북 학술회의 개최라든지 이와 유사한 순수 민간단체의 교류 움직임에 대하여 이 단체들이 상당히 정부비판적 성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라 할 정도로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범민련 등의 통일운동 차원의 교류는 남한당국에 의하여 거부되고, 순수 민간 차원의 교류는 주로 북한당국에 의하여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착상태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는 무척 어려운 물음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이러한 교착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민간단체의 교류와 통일운동의 교류를 연계하여 정치적으로 타결하는 방법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政治的·非政治的 交流의 병행 추진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식은 남과 북의 양 당국자에 의하여 다같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실현가능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식을 누가 제기할 것이고 그 타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뜻과 순수한 의지

에도 불구하고 남·북 학술교류의 전망은 간단치 않고 많은 난관과 장애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도 가능한 방식은 국내·외에서의 남·북을 포함한 多者間 국제회의에서의 남·북 교류와 서울토론회 같은 남·북·일, 남·북·미 같은 3者 형식이 아닌가 싶다. 제3자와의 공동주최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남·북이 단독대좌하였을 때 발생하는 예민한 문제들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多者 속에서의 접촉은 반드시 남·북 직접 접촉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다자간 접촉방식이 남·북 교류를 대체할 수는 없다.

## 5

현재의 국제적 그리고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구조 속에서 과연 남·북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는 것일까? 비록 지극히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공간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남·북한의 학계는 이러한 분단상황 하에서의 學術空間 개발과 확장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단협의 시도나 여성단체의 시도는 일정한 좌절과 제한된 성과에 그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좋은 뜻과 순수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분단상황 속에서 배태된 대치논리와 교착논리를 극복하고 우리 시대 學問의 不具性을 克服하려는 노력을 멈추서는 안 될 것이다. ■